

이달의 초점

2026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과 과제

2026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신현웅·여나금|

2026년 사회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김태완|

2026년 사회서비스와 돌봄: 현황과 과제

|황주희·김세진·이주연·김유휘|

2026년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이소영·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6년 사회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Prospects and Tasks for Social Security Policies in 2026: With a Focus on Income Security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빈곤층 지원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와 선정 기준 조정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는 예술인 및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 연구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고립, 취약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 또한 지켜볼 지점이다. 2026년에 있을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개편 시 추가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5년은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진행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일명 관세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2025년에는 사회보장 관련 어젠다(연금개혁, 지역통합돌봄서비스, 사회적 고립 등)가 등장하였는데, 일부는 해소, 일부는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6년 사회보장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2025년 6월 시작된 신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이다.¹⁾ 2025년 6월 10일부터 임

1) 2025년 집행된 정부 예산은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026년 시작된 정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기가 시작된 신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6~8월 두 달간의 논의 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중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3).

신정부 등장과 함께 2025년에 있었던 사회보장 분야 정책 중 특히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서 주목할 변화는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지나 사회적 합

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보장과 재정 측면에서 일시적이지만,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²⁾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립·은둔자, 위기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요 사회보장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이어 사회보장 분야 특히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표 1]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관련 국정과제

|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 |
|------------------------|-----------------------------------|---------|
| [국정 77]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 |
| [국정 78]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보건복지부 |
| [국정 79]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보건복지부 |
| [국정 80]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
| [국정 81]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기재부·행안부 |
| [국정 82] |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금융위원회 |
| 전략 4 :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 |
| [국정 87]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
| [국정 88]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여성가족부 |
| [국정 89]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조실 등 |
| [국정 90] | 튼튼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
| [국정 91] |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 보건복지부 |
| [국정 92]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 고용노동부 |

출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2025, p. 12.

뒤의 예산 기반 정책을 시행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p. 28).

변화가 2026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조망해 보고자 한다.³⁾

2 사회보장 분야: 소득보장 정책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77번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25).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의료급여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25). 이 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상병수당 확대 등이 담겨 있다.⁵⁾

현재 제시된 국정과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축소하고, 기준중위소득 조정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부족한 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속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다. 속도 측면에서 보면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상향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인데, 시행 시기가 지체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 역시 오랜 기간 쟁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간소화 속도가 생계 및 주거급여 등과 차이가 있다. 반면에 기준선 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보면 생계급여 기준선 상향은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 <표 2>를 보면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생계급여액은 월 약 55만 원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약 38.9%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약

3)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기존 다른 정부에 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넓게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비전이나 철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실용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와 같이 각 정부가 사회정책에서 추진할 방향이 사전에 제시된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은 여전히 논의중이라는 점이다.

4) 국정과제 77번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25).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과는 다른 정책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오랜 기간 기본사회 관련 어젠다와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 국정과제가 향후 우리 사회,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상병수당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추진되어 전 정부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시범사업에 그친 상병수당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역시 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신청주의 폐지 또는 완화, 자동 지급 관련 논의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신청주의 관련 변화도 2026년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요한 정책 방향이다.

6) 신성식. (2025. 11. 24.). 77만원 VS 68만원, ‘돈 한푼 안내’ 생계급여에 역전당한 국민연금. 중앙일보.
이준영. (2025. 10. 2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더팩트.

[표 2]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수별 평균생계급여액

(단위: 원)

| 구분 | 전체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 2016년 | 397,909 | 328,397 | 519,695 | 642,914 | 756,826 | 832,934 | 942,390 | 1,178,581 |
| 2017년 | 427,727 | 355,606 | 561,591 | 707,527 | 840,573 | 929,013 | 1,023,925 | 1,321,292 |
| 2018년 | 411,697 | 340,402 | 554,936 | 722,254 | 862,546 | 966,593 | 1,058,329 | 1,335,625 |
| 2019년 | 401,544 | 334,151 | 549,909 | 739,679 | 880,750 | 995,976 | 1,098,821 | 1,335,933 |
| 2020년 | 418,767 | 347,482 | 578,509 | 806,937 | 965,097 | 1,098,068 | 1,239,439 | 1,537,279 |
| 2021년 | 429,534 | 362,982 | 594,177 | 835,786 | 993,750 | 1,122,689 | 1,281,851 | 1,599,221 |
| 2022년 | 447,568 | 382,046 | 620,811 | 880,952 | 1,046,458 | 1,178,399 | 1,336,616 | 1,636,969 |
| 2023년 | 474,043 | 408,989 | 654,314 | 922,238 | 1,093,729 | 1,229,388 | 1,407,616 | 1,729,425 |
| 2024년 | 552,877 | 480,442 | 761,956 | 1,056,733 | 1,254,547 | 1,397,367 | 1,579,930 | 1,918,456 |

주: 매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집행 실적 가구를 기준으로 추출.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통계”, 보건복지부, 2025, p. 116.

4.2%씩 높아지고 있다.⁷⁾

의료급여 역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향후 부양의무자 간소화를 통해 늘어나게 되는 재원 부담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이를 조정하기 위한 대화와 노력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장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미 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이 재명 정부에서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국정과제 90 ‘튼튼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25). 2026년에 지켜볼 점은 다층노후소득 보장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

7)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2.2%(2016년 95.783, 2024년 114.18), 같은 기간 실질임금 연평균 1.22%(2016년 3242만 원, 2024년 3573만 원)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급여가 추가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가데이터터치, 연도미상, 국가통계포털-물가-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P2_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J22003%26vw_cd%3DMT_ZTITL%26orgl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터치. (연도미상). 지표누리-한국의 사회지표-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F0130>

한 것이다.⁸⁾ 지난해 3월의 국민연금 개혁이 미완의 완성이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 역시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자칫 연금개혁,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사회적 타협보다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국민연금 및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노인 빈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고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는 점에서 2026년에 총실행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⁹⁾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사적 영역에서는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에는 주택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에는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30, 144). 이들 사항이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보장 영역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고용 혹은 일자리 부문으로 분류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또한 2026년에 주목할 정책 변화이다. 국정과제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 세대 맞춤형 지원’으로 ‘어르신 지원 강화’ 속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5년에는 ‘노인 사회활동(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2016년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3년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체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가원 외, 2024). 주요 사업으로는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체계를 통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소득보장 영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활동비와 더불어 차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급여, 노인일자리 수당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2026년에 검토될

8) 신도경. (2025. 11. 21.). **李 정부 연금특위 자문위 첫 가동…尹 정부 연금개혁 ‘진단’**. 뉴스핌.

9) 다층소득 보장체계 구축 시 검토되는 점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정년 연장은 정책적으로 세대 간, 기업과 노조 간에 참여하게 의견 대립이 있는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82번에서 정년 연장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 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연령 조정, 사회보험료 부담 연령 상황 등 역시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한 후속 조치 측면에서 사회보장에 미치는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표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예산 지원 기준

| 구분 | | 활동비 (월) | 부대경비* (연) | 참여기간 | 합계 (연) |
|----------------------|-----------------|------------|--------------|---------|-----------|
|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 | 290천원 | 180천원 | 평균 11개월 | 3,370천원 |
|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 | 634천원 | 2,124천원 | 10개월 | 8,464천원** |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 2,670천원 | | 연중 | 2,670천원 |
| | 취업지원 (취업알선형) | - | (지사체보조)150천원 | 연중 | 150천원 |

*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 주휴 및 연차 수당 연 1,585.5천원 포함

출처: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2025, p. 10.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재 전체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7.6%로 이들 노인 중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 노인의 참여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있는 가운데, 부족한 노인 일자리를 두고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계급여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급여를 받을 경우 비수급층 노인과의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현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신정부에서 시작되는 신규 사업 중 2026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분야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흐름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다.¹⁰⁾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에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국정과제 105 기대효과의 '기본 생계·서비스 여건을 마련'이라는 부문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13, 165).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실행 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1차적으로 7개 군을 대상으로

10)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내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어 온 정책이다. (보편적)기본소득이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특정 직업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으로, 일명 사회수당 성격이 좀 더 짙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설계,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년간 지역(사랑)화폐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10. 20.).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방향이나 정책 설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구 감소나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기본소득 수급 대상을 지역이라는 기준만으로 계속 특정해 지원할 수 있을지, 나아가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자원 마련 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수 있다. 현재 제안된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어촌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과 성과평가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득보장제도 개편 혹은 확충 측면에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기타 주목해야 할 과제로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들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25, p. 129). 오랜 기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오던 사회적 경제, 제3섹터 등과 관련된 논의가 과제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과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과의 연계 방안이나 사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보장 분야: 취약계층 관련 정책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강화이다. 국정과제 91 ‘인구가족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5년간 고독사 사망자 규모 및 증가율

(단위: 명, %, 만 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고독사 사망자 수(A) | 3,279 | 3,378 | 3,559 | 3,661 | 3,924 |
| 전년 대비 증가율 | 11.2 | 3.0 | 5.4 | 2.9 | 7.2 |
| 전체 인구 수* (B, 만 명) | 5,134.9 | 5,133.3 | 5,125.9 | 5,114.6 | 5,103.7 |
|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A/B*10) | 6.4 | 6.6 | 6.9 | 7.2 | 7.7 |
| 전체 사망자 수**(C) | 304,948 | 317,680 | 372,939 | 352,511 | 358,569 |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A/C*100) | 1.08 | 1.06 | 0.95 | 1.04 | 1.09 |

출처: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5. 11. 27., 재인용.

(대한민국 정부, 2025, p. 143). 여기에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과 운영,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표 4).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2020년 6.4명에서 2024년 7.7명까지 증가하여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 91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정과제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88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에서는 취약 청년의 범주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40, 141). 고립·은둔, 사회적 외로움의 범위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생애를 중심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어느 하나의 정부 부처가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부터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를 통해 사회적 외로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이 2010년대 이후 주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한 이후 주요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체 청년보다는 취약 청년 혹은 위기 청년인 가족돌봄,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에서 청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소항목으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 속에서 구체적 정책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서 본 것과 같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 이들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기존 전달체계와 잘 접목되고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취약계층이지만, 오랜 기간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사회보장 정책에서 주요하게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던 금융취약계층, 금융불안정계층을 위한 국정과제 역시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강화가 다루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5, p. 130). 사회보장 분야에서 이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과다채무,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와 이후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이 불행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해 왔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부채와 관련된 지원에 국한해 왔다. 금융취약계층은 부채 이외에 생활고, 주거 및 고용불안, 정신적

취약 등의 문제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간과해 왔다(이주미 외, 2025). 2024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 방안 마련이 2026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시작된 신정부 국정과제 중 사회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과 2026년에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분야 변화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여기서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관련 모든 정책을 다루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사회보장 영역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중복적이거나 연계된 사업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영역에서 제안된 정책은 기존 제도를 개편 또는 확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포괄하고 있다. 각각의 개별 사업, 개별 정책은 모두 필요하고, 바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제도가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 기존의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확대나 신규 제도 도입이 기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나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신규 사업이 도입될 경우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를 수급하는 수급권자나 가구의 행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차분히 확충 및 신규 제도가 기존 제도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한다.

둘째,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확충될 경우 필연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느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누수 없이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제도를 설명하면서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충되는 청년미래센터 설명에 그치고 있다. 물론 청년미래센터의 필요성, 기능 및 기존 전달체계와의 중복성 등 여러 검토 사항이 있지만, 다른 제도에 비해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당장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때, 해당 군 지역의 읍면 복지센터가 핵심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 인력 지원 문제, 기본소득 관리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속에서 신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2026년은 신정부의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연도라는 점에서 국민과 언론 등이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소개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안)**.
- 국가데이터처. (연도미상). **국가통계포털-물가-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P2_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J22003%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l%3D%26
- 국가데이터처. (연도미상). **지표누리-한국의 사회지표-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_Info.do?idxCd=F0130
- 김가원, 박경하, 신상훈, 조준행, 강은나, 남기철, 이석원, 이소정, 최혜지, 한정란.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5. 10. 2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통계**
- 보건복지부. (2025. 11. 27.).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 [보도자료].
- 신도경. (2025. 11. 21.). **李 정부 연금특위 자문위 첫 가동…尹 정부 연금개혁 '진단'**. 뉴스핌.
- 신성식. (2025. 11. 24.). **77만원 VS 68만원, '돈 한푼 안내' 생계급여에 역전당한 국민연금**. 중앙일보.
- 이주미, 김태완, 김성아, 강예은. (2025). **복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준영. (2025. 10. 24.). **의료급여 정률제 중단 석달 만에 재논의…시민단체 대화 '보이콧'**. 더팩트.

Prospects and Tasks for Social Security Policies in 2026: With a Focus on Income Security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provide an outlook, based on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agenda, on the policy changes expected this year in income security and in support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 income security, measures on the horizon include revisions to eligibility criteria and support-obligor rules for livelihood allowances and medical benefits. As a follow-up to the National Pension reforms implemented earlier in 2025, discussions are likely to continu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Now that pilot basic income programs for artists and rural residents are on course for implementation, the effect they may have on the existing system warrants attention. Concerning socially vulnerable groups, progress in policy discussions on socially isolated youth and finan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should be closely monitored. There are additional changes planned for 2026 that should also be kept under review for their effect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